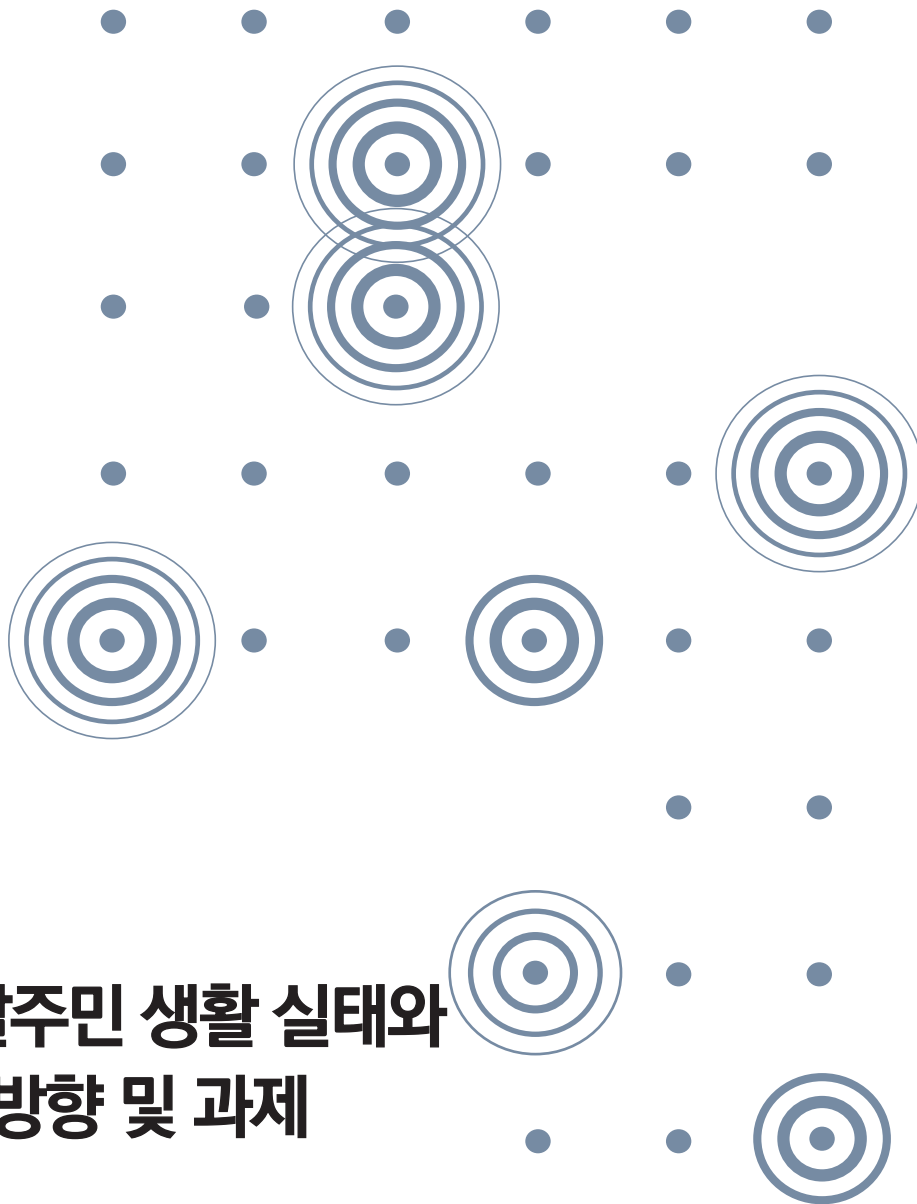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425호 2025. 7. 14.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와
가족 중심 정책 방향 및 과제**

문인철

연구위원

송미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425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와 가족 중심 정책 방향 및 과제

발행인 오 균

편집인 백선혜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5년 7월 14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7. 14.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25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와 가족 중심 정책 방향 및 과제

문인철 연구위원
02-2149-1255
mic555@si.re.kr

송미경 연구원
02-2149-1422
meekyong@si.re.kr

요약	3
I. 개인에서 가족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전환	4
II.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	7
II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제언 분석	16
IV. 서울시 가족 중심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과 과제	19

요약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의 토대이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간 유대감이 높고 불화가 낮아 가족 해체의 가능성이 현격히 낮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 외상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외로움 등으로 높아진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은 기존 혹은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경제적 차원과 더불어 안정적 가정생활은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 자립·자활의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높이고, 남북 주민 간 통합 문화 형성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2024.7.14.)했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점을 자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민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정책 지향점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가족이 한층 더 강화된 가족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정부나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진행한 가구 단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 결과 61.6%가 1인 가구로 일반 서울 시민(36.8%)보다 약 두 배가 높았다. 남북하나재단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이번 조사에서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일반 시민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비교적 높았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독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양육과 일의 병행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의 주요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가족과 개인의 특성을 종합한 유기적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필요

서울시는 개인 중심의 정착 및 자립·자활에서 가족과 그 구성원으로 확대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가족 중심 지원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첫째,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재결합,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둘째,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셋째, 1인 가구 고립 예방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넷째,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크게 네 방향으로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 개인에서 가족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전환

I 가족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환 추진

남한사회 정착과 자립·자활의 토대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필요

- 가정의 건강성 여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에 필수 요소
 -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는 ‘가정’에서 출발
 - 여기서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간 유대감이 높고 불화가 낮으며, 화목해 해체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가정
 -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보호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건강한 가족’ 형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자활에 필수
 - 2014~2019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1,265건) 중 418건이 배우자와의 이혼
-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 형성과 지속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과 사회안전망 확보, 남북 주민 통합에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출신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가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15.18%, 남한 주민 출신 12.50%, 한족 4.46%¹⁾
 -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출신 중 12.5%만 남한 주민이라는 것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점
 - 연구에 따르면, 남한 주민과의 결혼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동기 작용²⁾
 - 남한 주민과 결혼하는 이유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 남한사회 정착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
 - 또한, 새로운 정착지 주민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확보 요인 존재
 -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하는 이유는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심리적 요인이 작용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족 중심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전환 추진의 공감대 형성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면서 통일의 마중물이자 우리 국민인 이들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2024년 2월 21일, 정부(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권익을 높이며, 남

1) 국가인권위원회, 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 채명자·임춘희, 2019,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결혼생활 변화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4); 한순옥·이기숙, 2014,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의 결혼 의미와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 북 주민 간 통합 문화 형성과 통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7.14)로 제정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더불어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더욱 강화된 국가의 종합적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 등 안정적 정착에 노력
 - 특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 강조³⁾
- 18개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탈북민 가족 공동체 중심’ 정책 지향점 결정
 - 2024년 2월, 정부와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
 -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출산 장려, 탈북청소년 멘토링(mentoring)과 교육지원, 탈북민 고용 확대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지방 거주 장려책 강화, 해외 탈북민 보호, 마음 건강 및 위기 가구 지원, 인식 개선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동의
- 중앙-지방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인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은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을 지향하되 북한이탈주민 가족 대상 지원 강조
 - 2024년 5월에 발표된 제4차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2018~2020)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방향을 계승하되 정착지원협의회 회의(2024.2.) 내용을 토대로 6대 분야 24개의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정책 과제 제시
 - 제4차 계획은 이전 계획들에서 나타났던 북한이탈주민 가족 대상 지원 부재, 고용의 질적 측면 고려 미흡, 인식 개선 부족 등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포용적 문화와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Ⅰ 가족이 더욱 강조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과 계획 수립 필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가족 중심 서울 동행 추진 강화 필요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2013년 5월 16일에 제정
 - 2013년 6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5대 과제 2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 마련⁴⁾

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416>

- 2022년 2월, 9년 만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발표
 -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확대
 - 2024년 1월 1일, 남북협력과를 ‘평화기반조성과’로 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한층 더 강화
- 다만,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서 가족 관련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서울시는 초기 정착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그리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계획 수립
 - 2024년 3월, 서울시는 ‘위기 북한이탈주민 안정 기반 마련과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5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통행 추진계획’ 발표
 - 16개 사업 중에서 가족 관련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위기 징후 가구 발굴·지원’, ‘찾아가는 건강 돌보미 시범 사업 운영’, ‘정부·서울형 긴급복지 사각지대 보완 긴급 생계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
 - 이전 계획과 비교해 가족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탈북민 자녀 학습지원을 제외하고 위기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계 존재
 - 특히,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가족 구성원의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과 사회·경제적 욕구 등 생활 실태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가족 중심 사업 추진 필요
-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는 개인 중심으로 진행
 - 서울시가 가족 중심의 정책 수립과 맞춤형 사업 추진을 하려면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 파악이 중요
 -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가족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과 추진 위해서는 가족(가구) 중심의 생활 실태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신규 사업 발굴 필요

4)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39384>

II.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

I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 설계 내용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 방법과 대상

- 조사 대상과 방법, 내용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참여자 1,683명 중 응답자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응답자(눈덩이 표집) 등 총 500명(가구 단위 조사를 위해 한 가구에서 1인만 대표로 조사)
 - 온라인/모바일 및 대면조사 병행(2024년 7월 24일~11월 7일)
 - 대상의 특성, 가구 일반, 경제활동, 건강, 식생활, 사회적 관계·활동, 복지 의식·욕구

[표 1] 조사 방법별 데이터 수집 결과

구분	전체 조사량(중복 포함)	최종 유효 표본(중복 제거)
개별 면접조사	64	64
온라인 설문조사(문자 발송)	62	62
링크, QR코드 조사	362	313
현장 조사(오프라인 및 수거)	71	61
총합계	559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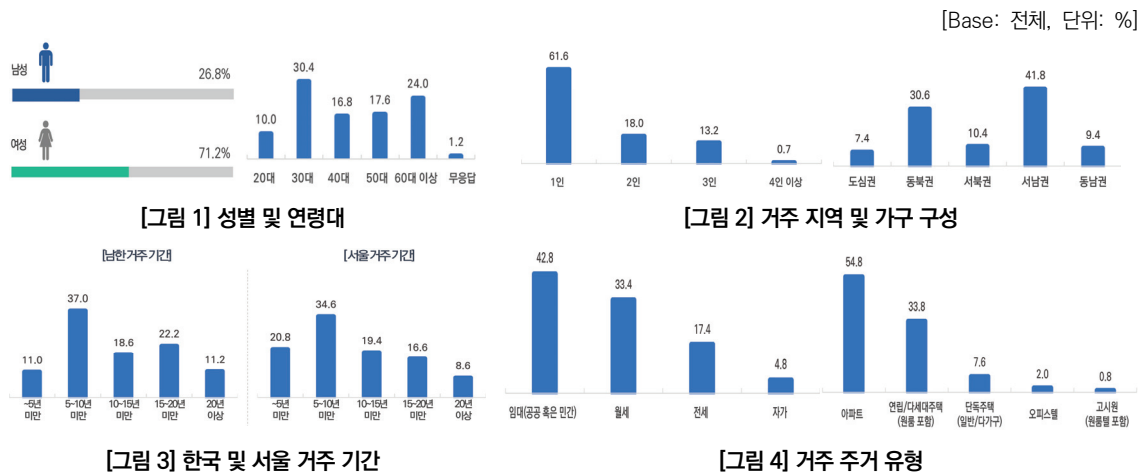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의 특성

여성과 젊은 층, 임대주택 거주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 여성 71.2%로 일반적 탈북민 인구 구조 반영, 연령대는 20~30대 40.4%로 젊은 층이 다수
 - 조사 대상은 ‘남성’이 26.8%, ‘여성’이 71.2%, 연령대는 ‘20~30대’ 40.4%, ‘40~50대’ 34.4%, ‘60대 이상’ 24.0%
 - 전국 북한이탈주민 비교(2023년 기준): ‘남성’ 24.7%, ‘여성’ 75.3%, 20대 9.1%, 30대 23.4%, 40대 27.0%, 50대 26.0%, 60대 이상 12.7%⁵⁾
- 주거지는 서남권과 동북권에 집중, 서울 거주 기간은 ‘5~10년 미만’이 가장 많아
 - 현 거주지는 ‘서남권’ 41.8%, ‘동북권’ 30.6%, ‘서북권’ 10.4%, ‘동남권’ 9.4%, ‘도심권’ 7.4%, 무응답 0.4%

5) 남북하나재단, 2023,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20.

- 서울 거주 기간은 '5~10년 미만'이 34.6%, '5년 미만' 20.8%, 10~15년 미만 19.5%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다수가 1인 가구이며,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 공공임대가 다수
 - 1인 가구가 61.6%로 일반 서울 시민 36.8%에 비해 매우 높고, '2인' 18.0%, '3인' 13.2%, '4인 이상' 0.7%, 무응답 0.4% 순
 -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4.8%로 가장 높고, 거주 유형은 '임대(공공 혹은 민간)'가 42.8%, '월세' 33.4%, '전세' 17.4%, '자가' 4.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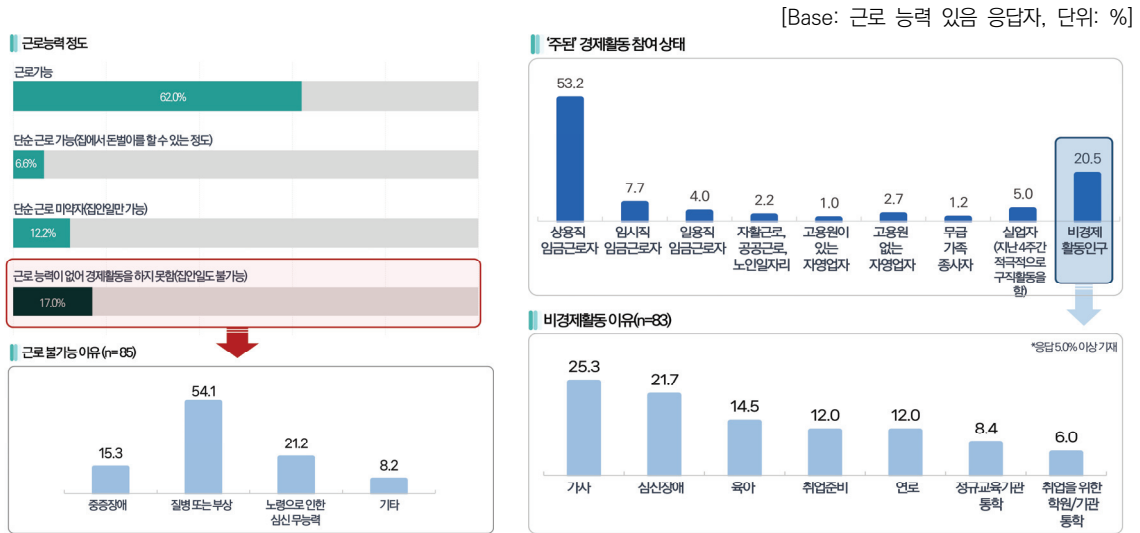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경제 현황

남성과 젊은 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고,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 직장 생활 유지

- 가구주의 근로 가능률은 62.0%이고, 남성과 젊은 층에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높아
 - 단순 근로 미약자(집안일만 가능)는 12.2%, '단순 근로 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은 6.6%, '근로 불가능'은 17%
 - '근로 가능자'는 남성(81.3%)과 20~30대(84.2%)가 대부분 차지
 - 근로 불가능자의 사유는 질병·부상(54.1%), 노령(21.2%), 중증 장애(15.3%) 순
- 경제활동인구 53.2%가 상용직 근로자로, 남성은 서비스종사자가 여성은 사무 종사자가 다수
 - '비경제활동인구'는 20.5%,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7.7%, 실업자는 5%
 - 특히, 상용직 비율은 남성(75.6%)과 20~30대(71.1%), 서울 거주 5~10년 미만 집단(71.8%)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비경제활동인구는 서울시 일반시민(10.6%)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체 국민(34.7%)보다 낮으며, 사유는 '가사(25.3%)', '심신장애(21.7%)', '육아(14.5%)'

- 주요 직종은 사무 종사자(27.8%), 서비스종사자(25.0%), 단순 노무 종사자(16.7%)이고, 남성은 ‘서비스’ 종사자(34.6%)가 가장 높고, 여성은 ‘사무’ 종사자(38.9%)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 거주 5~10년 미만 응답자는 사무직 비율(46.8%)이 가장 높아



[그림 5] 근로능력 정도 및 근로 불가능 이유

[그림 6]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및 비경제활동 사유

20~30대 남성은 직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길어

- 근로 시간 형태는 전일제(82.1%)가 시간제(16.2%)보다 많고, 평균 근로 시간은 34.5시간
 - 남성(92.5%)과 20~30대(92.5%)는 전일제, 여성과 고령층은 시간제 근무가 다수
 - 평균 근로 시간은 '30~50시간 미만' 59.5%로 가장 많았고, '10시간 미만'이 17.5%, '50시간 이상'이 11.0%, 10~30시간 미만이 7.9% 순
 - 근로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남한 거주 5년 미만(40.85시간)이었으며, 특히 20~30대는 주당 근로 시간이 평균 40.32시간으로 타 연령대 대비 긴 상황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가구소득은 서울 시민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최근 1년간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약 2,404만 원⁶⁾
 - '2,000~4,000만 원 미만'이 34.8%, '0~1,000만 원 미만'이 20.9%, '0원'이 22.7%였으며 1,000~2,000만 원 미만이 9.8% 차지
 - 남성(2,444만 원) 대비 여성(1,628만 원)의 연간 소득이 낮았고, 20~30대의 연간 소득(2,484만 원)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815만 원 수준으로 다소 낮은 상황
 - 일반 서울 시민은 약 7,379만 원,⁷⁾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3,613.4만 원

6) 이번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20~30대 응답자가 다소 많기 때문(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 월평균 생활비는 약 188.8만 원
 - 지출 규모별로 '100~200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50~100만 원 미만' 29.4%, '200~500만 원 미만' 17.5% 순
 - 40~50대가 약 301.9만 원으로 월평균 지출이 가장 높아
 -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1+2순위 기준)은 '식료품, 비주류 음료', '주거, 수도, 광열', '보건(의료비)', '교육비' 순
 - 통신비는 '5~10만 원 미만'(38.9%), 교통비는 '10만 원 이상'(42.2%)이 가장 높아

소액 부채가 많고 젊은 가구일수록 고액 부채가 증가

-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약 6,796만 원
 - 가구 부채 총액 응답 결과 '3천만 원 미만'이 50.9%, '1억 원 이상' 17.7%,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9.7%, 부채가 없는 가구는 9.1%
 - 1억 원 이상 고액 부채 가구는 20대~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20대(25.0%), 30대(21.9%), 40대(17.9%), 50대(18.8%), 60대 이상(9.5%)
- 월평균 저축액은 60만 원이며, '30만 원 이상' 저축이 26.8%로 가장 많고, '10만 원 미만' 10.8%, '10~30만 원 미만' 5.4% 순
 - 서울 거주 5~10년 미만 응답자의 저축액은 80.7만 원으로 타 집단보다 높은 수준
- 응답자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사회적 지위 인식도 다소 낮은 수준
 -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6%로 가장 높고,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2.8%,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10.8%
 -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비중은 서울 거주 기간 10~15년 미만(25.8%)이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위 인식은 낮지만, 젊은 층에서 '중하' 비중이 높아

-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하상 20.0%, 하하 34.2%) 비율이 54.2%로 다수지만, '중하'의 비율도 34.2%로 낮지 않은 상황
 - 남성(70.1%)과 20~30대(69.3%)에서 '중(중상+중하)' 비중이, 여성(63.8%), 60대 이상(85.0%), 서울 거주 15~20년 미만(78.3%)에서 '하(하상+하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7)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221132001>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건강과 식생활 현황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족 중 만성질환자가 많은 상황

-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가 34.2%, '없다'가 64.8%
 - 60대 이상에서 만성질환자인 가족이 '있다' 비율이 69.2%
 - 참고로, 일반 서울 시민 가구원의 만성질환자 포함 비중은 6.1%⁸⁾
 - 가구 내 만성질환자는 대부분 '1명(94.0%)'이고, '2명'은 6.0%이며, 투병·투약 기간은 1~2년 미만인 13.5%, 2년 이상이 12.0%
 - 만성질환자 유형은 '우울' 36.5%(65명), '고혈압' 33.7%(60명), '관절질환' 29.8%(53명), '당뇨병' 17.4%(31명) 순
 - '우울' 비율은 여성(40.3%), 40~50대(48.6%), '고혈압'은 60대 이상(43.0%)이 높은 상황

전체 가구의 8.0%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며, 14.0%가 진료받지 못한 경험 존재

-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구원이 '있다' 응답 8.0%, '2명 이상'도 존재
 - '있다' 응답자 중 60대 이상 가구(17.5%)의 비중이 높았고, 2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2.6% (평균 약 1.03명)
-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하여 14.0%가 '있다' 응답
 - 연령대가 높을수록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높고, 60대 이상은 21.7% 차지
 - 주된 이유는 70.0%가 '경제적인 이유(진료비 부담)'를 선택

전체 가구의 16.6%가 평소 식사량이 부족하다고 응답

- '식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가 39.8%, '보통이다'가 43.0%, '부족하다'가 16.6%로 조사
 - '보통이다'와 '부족하다'의 주요 원인은 '식품 구매 비용 부족'(40.6%)
 - 일반 서울 시민은 83.6%가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했고, 부족한 이유는 '시간 부족(37.1%)', '경제적 이유(25.0%)', '식품 접근성 문제(21.8%)' 순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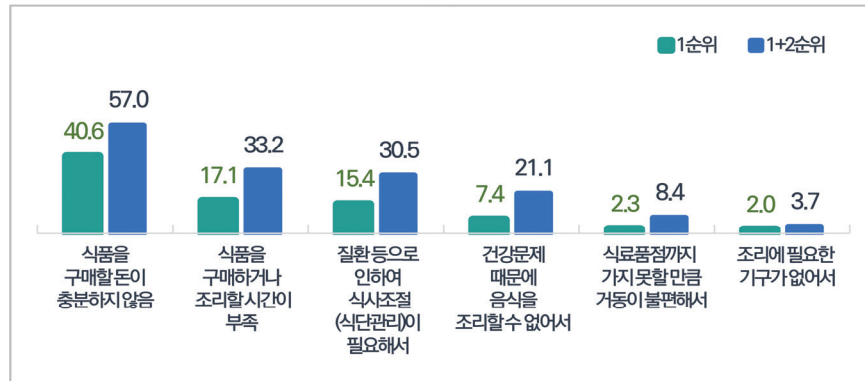
8) 김승연·노승철·장익현·문진영·이영주·채황석, 2023, 「2022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 서울연구원, p.89.

9) 김승연·노승철·장익현·문진영·이영주·채황석, 2023, 「2022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 서울연구원, p.111.

평소 식사 충분도



식사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n=298)



[그림 7] 평소 식사 충분도

‘여성’과 ‘60대 이상’에서 부정적 감정이 높고, 전체의 10.0%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 보유

- 지난 일주일 동안 느낀 감정 중 ‘잠을 설쳤다’가 30.8%로 가장 많고,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가 25.8%로 두 번째 차지
 - 이 외에도 ‘상당히 우울했다’ 25.6%, ‘마음이 슬펐다’ 21.0%,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10.6% 차지
 - 여성과 60대 이상에서 부정적 감정이 더 많이 나타남
-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응답자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3.4%)’으로 나타났고, ‘질병 또는 장애(20.8%)’와 ‘외로움, 고독(17.0%)’도 존재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관계·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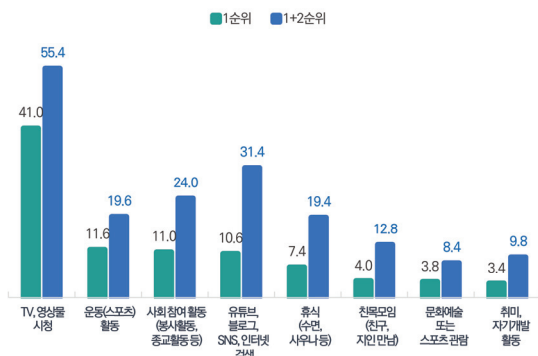
서울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 주 1회 이상 직접 만나거나, 통화, 문자/인터넷을 통해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가 가장 많았고, ‘가족’, ‘직장동료’와의 연락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20~30대는 친구와의 연락 비중이 높고, 그 형태는 직접 만남 80.5%, 통화 82.3%, 온라인 85.4%로 다양하게 나타나
 - 남성은 ‘가족’보다 ‘직장동료’와의 연락 비율이 더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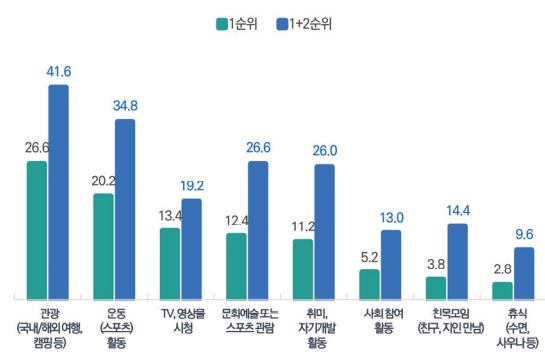
- 사회적 관계 중 북한이탈주민 출신과의 활동은 ‘종교 활동’ 35.0%, ‘직장 등 경제활동’ 25.2%, ‘여가 활동’ 14.4% 순
 - 남한 출신 주민과의 활동은 ‘직장 등 경제활동’(36.4%), ‘종교 활동’(19.0%), ‘여가 활동’(18.6%) 순
 - 남성은 ‘직장 등 경제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은 ‘종교 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이 가장 많아
- 다수는 남한 출신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의존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에 집중
 - 남한 출신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60.8%, 어렵다는 응답은 38.5%
 - ‘60대 이상’에서 어려움이 55.0%로 가장 높았고, 주된 이유는 문화적 소통방식에서의 차이(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52.8%)
 -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77.6%, 남한 출신 59.4%
 - 갑작스러운 사고, 긴급상황,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60.2%, 남한 출신 45.4% 차지
 -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60.4%이고 남한 출신 주민이 39.2% 차지

북한이탈주민의 주된 여가 활동은 TV/영상물 시청이 가장 많아

- 주된 여가 활동은 TV/영상물 시청(41.0%), 운동(11.6%), 사회참여 활동(11.0%) 순
 - 남성은 ‘운동(23.1%)’, 60대 이상은 ‘사회참여 활동(22.5%)’이 많아
 - 참고로 일반 서울 시민은 TV/영상물 시청(31.9%), 운동(14.3%) 순
 -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1+2순위)’으로는 관광(41.6%), 운동(34.8%), 문화예술 관람(26.6%), 취미/자기 계발(26.0%), TV/영상물 시청(19.2%), 친목 모임(14.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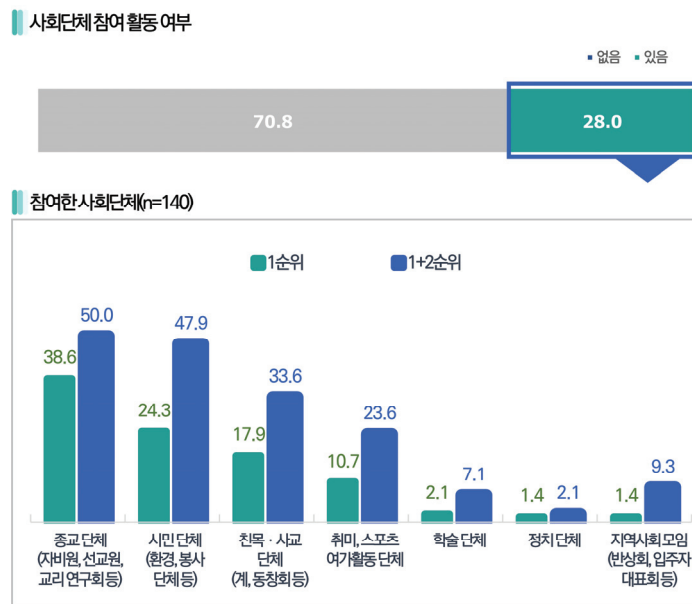
[그림 8] 주된 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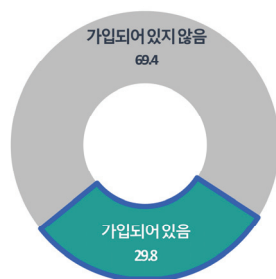
[그림 9]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 활동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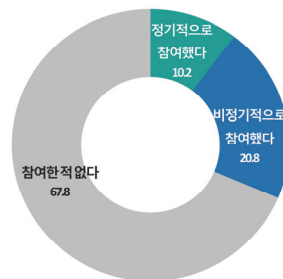
-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0%이고, 없다는 응답은 70.8%로 높아
 - 남성(17.9%)보다 여성(31.7%)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높았고, 특히 40~50대(39.5%)와 서울 거주 기간 20년 이상(48.8%)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
 -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단체로는 ‘종교단체(자비원, 선교원, 교리 연구회 등)’, ‘시민단체(환경, 봉사단체 등)’, ‘친목·사교 단체(계, 동창회 등)’ 순
 - 북한이탈주민 운영 단체의 가입자는 29.8%이고,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는 10.2%, 비정기적 참여는 20.8%로 총 31.0% 차지



[그림 10] 사회단체 참여 활동



[그림 11] 북한이탈주민 단체참여



[그림 12] 자원봉사활동 참여

I 북한이탈주민 복지 의식과 욕구 실태

복지 차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

- 서울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점 만점의 3.81점으로 높은 수준
 - 항목별 만족도는 ‘가족관계’ 3.81점, ‘직업(일)’ 3.71점, ‘사회적 관계’ 3.64점 순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자녀의 교육 여건’(3.20점)과 ‘가구의 소비생활’(3.28점)로 경제적 차원과 관련을 보여
 - 전반적인 서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3.72점)보다 남성(4.04점)이 높고, 남한 거주 기간 10~15년 미만(4.10점)과 서울 거주 기간 10~15년 미만(4.08점)에서 높아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

- 본인의 생활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상황(3.74점)
 - 항목별로는 ‘환경’ 3.77점, ‘교육’ 3.75점, ‘보호 안전 및 건강’ 3.74점 등의 순
 - 반면, ‘아동 돌봄’은 3.34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
 - 여성(3.64점)보다 남성(4.00점)의 생활영역 만족 수준이 높았고, 특히 남한 거주 기간 5~10년 미만이 4.0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

서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도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서울 거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적은 수입이 주요 원인
 - 38.0%가 ‘수입이 적어 기초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주택 마련,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 22.2%, ‘건강 문제’ 10.8%, ‘노후 불안의 문제’ 9.8% 순
 - 20~30대(36.6%)와 남한 거주 기간 5~10년 미만(31.9%)은 ‘주택 마련,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가 주요 경제적 원인

Ⅲ.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제언 분석

Ⅰ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특성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여성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며,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

- 이번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이 많고, 1인 가족 비중과 미혼 및 이혼, 사별 등 현재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은 수준
 -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처럼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 세 배(여성 71.2%, 남성 26.8%) 많은 상황
 - 1인 가구 비중은 61.6%로 일반 서울 시민(36.8%)보다 높은 수준
 - 미혼·이혼, 사별 등 현재 배우자 없는 비율은 60.2%, 기혼자 비중은 20.4%에 불과
 - 정서적·심리적 취약성 확인과 고립·위기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조사 결과
- 오랜 기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 복지 수준과 주거 자립성이 낮은 상황
 - 남북하나재단의 실태조사 결과처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54.8%가 아파트 거주
 - 다수가 오랜 기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자립과 주거 복지 수준이 낮은 상황
 -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임대아파트에서의 이탈이 어려운 상황
-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해 소득 수준은 낮지만, 생활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상황
 - 이번 생활 실태조사에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소득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조사보다 낮은 건 조사 대상의 연령대 비중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
 - 그러나 남북하나재단 조사의 서울시 부분에서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유의미성 존재
- 다만, 이번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에서는 남북하나재단 조사와 달리 30대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남북하나재단 조사에서는 40대가 가장 큰 비중
 - 40대(27.0%) > 50대(26.0%) > 30대(23.4%) > 60세 이상(12.7%) > 20대(9.1%)
 - 이를 다시 서울시만 별도로 보면, 50대가 가장 큰 비중
 - 50대 26.5% > 40대 22.0% > 30대 20.6% > 60세 이상 14.6% > 20대 13.7%
 - 이번 연구의 조사에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30대(30.4%) > 60세 이상(24.0%) > 50대(17.6%) > 40대(16.8%) > 20대(10.0%)
 - 남북하나재단 조사와 연령대 비중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본 연구 조사가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제언¹⁰⁾

가족 중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사업 발굴 방향

- 지역사회 기반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족 정책 전환 필요
 -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 간 일상생활 협력 매칭 프로그램, 지역사회 일 자리 연계 등의 방안 제시
 - 교육과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미성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필요
- 지자체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및 안내(지원) 체계 강화 필요
 - 하나센터, 거주지 보호담당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업무 매뉴얼·설명서 개발 필요
 -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담당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및 보완 전략 수립 필요
 - 통일부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북한이탈주민 정책 모색 필요
 - 특히, 가족 단위 지원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형평성 문제 최소화 필요
- 가족 단위 지원과 관리를 개인 차원과 병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필요
 - 소위, '촘촘한 그물망 북한이탈주민 가족 지원 정책' 추진 필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제언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정부 초기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정착 물품 제공 및 지역 상품권 등 지원
 -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고려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개발
 -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 민간 기업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 노후 대비 및 건강 관리 지원
 -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후 준비 통장, 공공 일자리
 -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 자녀 교육 지원체계 강화
 - 대학 진학 지원 확대 및 민간장학금 연계
 -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별도 사업 마련 등

10) 조사 방법: 전문가 FGI를 수행하여 중앙정부 및 국책·시도 연구기관, 대학 소속 전문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 및 사업, '가족 중심'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조사(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29일)

- 정서·심리적 안정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체계 필요
 - 기존 중앙정부 운영 상담센터(마음숲 등)의 노하우(know-how) 활용 등 연계 추진 등

Ⅰ 가족과 개인의 특성을 종합한 유기적 북한이탈주민 지원 필요

종합하면, 개인 차원과 가족 중심의 지원을 병행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정책 필요

- 서울시, 개인 중심의 정착 및 자립·자활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된 포괄적 가족 중심 지원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생활 실태조사와 전문가 정책제언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포괄적이면서 유기적인 가족 정책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 즉, 가족을 중심으로 하되 구성원인 개인의 특성을 종합한 유기적 지원 정책 필요
- 서울시의 가족 중심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추진 필요
 - 첫째,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재결합,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 둘째,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 셋째, 1인 가구 고립 예방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넷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IV. 서울시 가족 중심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시 가족 중심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안)

추진 방향	추진 사업(안)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재결합,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상담 및 도우미 서비스 지원 - 가족 단위 언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통합 및 정착 프로그램 지원 - 가족 대상 경제·금융·취업(사업) 등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가족 불화 해결을 위한 부부·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 가족의 신체 및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 - 가족이 함께하는 집밥 지원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유형 및 특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가족 심리상담 지원 -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및 여가 등 취미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찾아가는 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 -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 대상 아침 식사 제공 -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 대상과 함께하는 식사 프로그램 제공
1인 가구 고립 예방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취미 활동 프로그램 제공 - 1인 가구 여행 캠프 제공(서울의 역사 및 생태 탐방 등) - '(가칭)아무 주제나 편하게 말해요'라는 1인 가구 전용 상담 특 제공 - 동네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공부문 채용 기회 제공 및 연결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영·유아 및 노인 등 북한이탈주민 돌봄 지원 -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I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재결합,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서울시는 건강한 가족을 형성 및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모색 필요

-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상담 및 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탈북 과정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가족 해체를 경험
 - 서울시는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간 재결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
 - 우선 가족 재결합의 경우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지원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더불어 상담 서비스 지원 필요)
- 가족 해체 방지 및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사업 추진 필요
 -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 외상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과 외로움 등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은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언어 교육’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통합 및 정착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또한, ‘가족 대상 자립·자활 관련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 대상 경제·금융·취업(사업) 등의 각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필요
-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불화 해결을 위한 부부와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의 신체 및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현재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소득이 낮고 대부분의 수입을 식료품에 사용한다는 점, 가족 간 식사는 정서적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¹¹⁾이라는 점에서 밀키트나 식자재 등을 제공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집밥 제공’이라는 사업을 추진 필요

I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탈북 및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 및 정신적·심리적 고통 경험

- 탈북 과정의 심리적 외상과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 차이로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불안정성 노출
 -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다양한 폭력을 경험¹²⁾하고,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 과정에서 남한 주민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차별 경험
 - 탈북 과정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새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 제고는커녕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자활 제약
-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외상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강도와 지속성이 커진다는 심각한 문제 존재¹³⁾
 -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과 더불어 출신 배경 노출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복합적인 다중적 어려움 발생
 - 어린 시절의 심리적 외상은 성인기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성 증진, 자기 존중감 하락, 나아가 신체적 건강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간관계 형성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을 초래
 -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고립되거나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사회적 취약성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

11)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11240133>

12)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_rights_defector-03102022105921.html

1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7673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개인과 그 가족이 겪는 심리적 외상을 고려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추진 필요

- 서울시는 가구 유형을 고려한 개인과 가족 단위의 맞춤형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필요
 - 가족 단위의 경우, 가족이 함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지원이나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개인 단위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필요
- 서울시는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필요
 - 취약·위기 가구 중에서도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가정을 선택하여 ‘가구 유형 및 특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및 여가 등 취미 활동 프로그램’ 제공 사업 추진 필요
 -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 상담 방문’ 서비스 제공 필요
 -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주 1~2회 밀키트나 도시락을 아침 식사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식사를 1인 가구나 고령자 가구의 경우 봉사자와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 즉, ‘함께 식사 프로그램’ 운영 필요

I 1인 가구 고립 예방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립 예방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높일 필요

- 낮은 연간 소득, 우울감과 자살 충동 등 정서적·심리적 취약성, 제한적인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와 여가 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 문제는 1인 가구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의 불안정성 요인은 이들의 고립에 많은 영향
 - 특히, 고령화가 될수록 1인 가구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수 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 증가
-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해 고립 예방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정부가 ‘고령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점¹⁴⁾에서 서울시는 모든 연령대를

14) 관계부처 합동, 2024.05,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

대상으로 정책 확장 필요

- 2인 가구라 해도 가구원 중 한 사람이 어리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일 경우 사실상 1인 가구와 같은 고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고립 예방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서울시는 1인 가구 고립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서울시는 ‘1인 가구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담당 부서인 ‘평화기반조성과’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1인 가구 활력 지원 프로그램’¹⁵⁾이나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서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취미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여행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1인 가구만 참여할 수 있는 서울 역사 탐방이나 생태 탐방 또는 유명 여행지를 방문하는 ‘1인 가구 여행 캠프’ 제공
 - 1인 가구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된 ‘(가칭)아무 주제나 편하게 말해요’라는 ‘1인 가구 전용 상담 톡’ 운영 필요
- 서울시는 ‘1인 가구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인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더욱 적극적인 사회단체 활동 필요
 - 고립을 예방과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같은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 데 도움
 -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는 데 도움
 - 서울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네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관련 프로그램과 연결 필요

I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과 지속 가능한 자립·자활 위해 경제적 문제에 집중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소득은 경제적 자립·자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보통 낮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낮은 급여의 일자리는 작업 환경이 안 좋거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동, 복지가 사실상 없는 질 나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심각한 제약

15) <https://www.ajunews.com/view/20240528085308908>

- 특히, 낮은 소득은 경제적 자립·자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이나 사회적 활동, 여가, 주거 등 생활환경 전반에 악영향
- 경제적 자립·자활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일과 가정 병행 문제
 - 일과 가정의 병행은 비단 북한이탈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과 달리 경제적·인적 토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큰 어려움 존재
 - 즉, 자녀나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정과 일의 병행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하게 되면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증가
 - 따라서 서울시는 경제적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책과 더불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여성 탈북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 채용 기회 제공 및 연결’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시청이나 자치구의 공무원 특별 임용’이나 ‘산하기관의 채용 시 기관 평가 점수 부여나 별도의 인건비 추가 책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할 필요
 - ‘일반기업’에도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 채용 시 ‘일정 기간 세금 혜택’을 주거나 ‘보조금 지원’을 추진할 필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아와 초등학생,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서울시는 가정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24시간 보육 지원이나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제공·구축할 필요
 - 북한이탈주민 가정 간 매칭이나 이북5도위원회 협조를 통한 실향민 가정 매칭, 또는 북한 지역 출신 커뮤니티 내 자율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방안도 고려
 - 또한, 서울시는 대안 교육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을 북한이탈주민 돌봄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서울시는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생필품 등 필요 물품 구매를 위한 지역 상품권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서울시는 가족 구성원의 수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역 상품권 제공 금액을 결정
- 서울시는 ‘노인 북한이탈주민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이나 ‘노인(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치구마다 시니어 고용 형태의 격차가 존재하며 절반 이상이 일용

직이라는 점은 고령(노인)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현 제도를 활용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

- 특히, 노인의 경우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획득과 이용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지식 획득에 어려움 존재
- 따라서 서울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공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
 - 노인 북한이탈주민이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지원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또는 기존 제도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할당량’ 확보 고려

○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 취업자 대상 직업 교육 기회 제공’을 추진할 필요

- 일반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도 높은 연봉과 복지가 잘 돼 있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¹⁶⁾
- 서울시는 미취업자뿐 아니라 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 필요
- 서울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기 취업자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현재 자신의 기술이나 업무 영역과 관련된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돕는 교육 지원 필요

○ 서울시는 ‘가족 단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정부의 창업보육센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 중심 정책 전환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
- 따라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가족 단위의 창업패키지’ 등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이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자립 역량을 확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미 존재

16) 문인철·송미경, 202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삶의 질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